

광남시론

시대정신에 반한 정당은 해산해야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우리는 언제부터가 계절을 얘기하면서 입에 달듯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한다.

그 어원은 노벨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황무지'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황폐한 상흔과 4월의 번덕스러운 기후변화로 갓 피어난 꽃들이 시들어감을 두고 가장 잔혹한 달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4월도 상흔이 크다. 이승만 독재정치가 장기 집권을 피한 3·15부정선거에 저항했던 4·19 민주혁명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엄청난 희생을 따랐던 달이다. 젊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불의에 맞서다 총칼로 짓밟힌 고통받던 시간들. 그 아픔과 기억이 쌓여 우리나라도 4월은 무겁고 가슴 아픈 달이 됐으나 독재정권을 물리침으로써 민주주의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체언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다 위대하고 숭고한 오월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시대를 맞이해 시대정신에 따라 제6공화국 헌법의 일부라도 이번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는 국민적 염원인 개헌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기고

김정섭

전남도 환경선임국장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의 동시 실현이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정책은 현장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산업 전환 수요와 재생에너지 기반, 환경 현안이 한데 모인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남·광주는 산업 현장과 연구·행정 기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남부권 핵심 권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충분한 담위성을 갖추고 있다.

첫째,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로 작동해야 할 대표 현장이다. 여수·광양·영암 일대는 석유화학·철강 등 대규모 배출 산업이 집적된 산업 전환의 최전선이며,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면, 정책 집행과 검증, 실증과 사업화를 맡

로 떠올랐다. 개헌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 제정을 한글화하고,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87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나 국회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197명)가 필요하므로 제1야당이 국회당의 동조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친위구태타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명백한 사과도 없고, 윤 어계인 세력과 부화뇌동하며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문제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에서 보듯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정당이고, 이미 합의되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헌안마저 거부하면 더 큰 빈축뿐만 아니라 보수당의 가치는 물론 민주정당의 가치까지 저버림으로써 이대로면 해산만이 답이 아니겠는가.

국가운영의 대전환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대전환의 시발점은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지만, 당장 어려우니 1차로 모두가 동의할 대로 개헌

하고, 전반적인 개헌은 2차 개헌으로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고 현실적이다.

40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 염원이고, 시대정신에 따른 개헌이 아직껏 성사되지 못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헌법은 개정하기 힘든 경성헌법이다. 여야 거대정당이 정치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1당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면 한 조문도 바꾸기 힘든 현실이니 시민의회 등 대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정국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일말의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자유투표로 최소한의 개헌안이라도 통과해야 정치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고 표명했던 헌법 전문만이라도 정리해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3·1 독립선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범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비롯해 “부마항쟁과 광주5·18 항쟁 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입각하여”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동안 5·18민주항쟁에 관한 명칭도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서 등장하면서 조직을 갖춰 10일 동안 죽음으로 불의에 저항했으며, 국민의 정부를 수립하는 그날까지의 투쟁 자체가 ‘민중항쟁’이었으니, 노태우 정부 시절 민화위에서 어설프게 지정한 5·18민주화운동을 ‘5·18민주항쟁’ 또는 광주5·18정신’으로 헌법 전문에서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환경·에너지 공공기관 이전, 왜 전남·광주여야 하나

은 핵심 기관이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할 기관이다.

둘째, 전남은 이미 재생에너지와 환경정책 실증의 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국 1위, 태양광 설비용량 전국 1위이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RE100 산업벨트, 영농형 태양광,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반시설 확충 등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와 한꺼번에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관리, 대기·수질 모니터링 기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술개발·실증 기능이 결합된다면,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된다.

셋째, 전남은 환경문제 대응 수요가 가장 절박한 곳 가운데 하나다.

농업과 연안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비점오염 관리 수요가 크고, 주요 하천과 연안의 수질 관리 중요성도 매우 높다.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기오염과 환경사고가 반복되며 주민의 불안과 우려 또한 누적돼 왔다. 피해와 부담은 지역이 감내해 왔는데, 정책 핵심 대응기관은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구조가 계속되는 안 된다. 환경문제가 집중된 지역에 환경정책 기관이 가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다.

넷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의 전남·광

주 이전은 국가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개발 이후 실증(테스트)·인증(검증)·조달(사용)의 연계가 핵심인데, 전남·광주는 여수·광양·영암 국가산단, 나주 에너지밸리, 광주첨단 과학국가산업단지 및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광주과학기술원의 환경·에너지 연구역량 등 산업 현장과의 연계 인프라를 함께 갖추고 있어 정책 실행력을 더욱 높여 준다.

다섯째, 두 기관의 전남·광주 이전은 단순한 지역 유치나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다.

이 두 기관이 여수·광양·영암 국가산단, 나주 에너지밸리, 광주의 산업·연구 기반과 긴밀해 연결되면 환경 관리, 탄소중립 실현, 산업 전환, 기술 실증이 한 권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름이 아니라 기능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 기능이 잘 작동하는 곳에 가야 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만큼은 더욱 그렇다. 전남·광주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적 공감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남·광주 이전은 환경안전을 강화하며,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발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임 있는 국가적 요구이자 결정이다.

기고

박형주

광주청소년살피기지원센터장



청소년의 꿈을 청년의 삶으로 이어가려면

학교 시절의 진로 고민이 대학과 사회 초년생의 삶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한다. 현재 이원화된 체제는 행정 낭비를 넘어 미래 세대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둘째,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 정책은 위기관리나 유해 요소 차단과 같은 '단순 관리'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은 지도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주체'다. 부처 독립은 청소년을 가족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자립 역량을 갖춘 '당당한 시민'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셋째, 정책의 전문성과 예산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라는 방대한 조직 안에서 청소년 정책은 늘 뒷순위였다. 성평등과 가족 이슈에 밀려 청소년 예산은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

청년 정책 역시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지만 실상은 각 부처로 흩어져 컨트롤 타워가 실종된 상태다. 독립 부처가 신설된다면 전용 예산을 편성하고, 이들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국가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적 접근이다.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숫자가 적어질수록 그 한 명 한 명에 대

한 국가적 투자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진다. 이들을 단순히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주제로 격상시켜 부처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윈스톱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기존의 사후 관리 위주의 '보호' 중심 접근이나, 경제 지표에만 치중된 '취업' 중심의 시각으로는 이들의 복잡다단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청소년에서 청년에 이르는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 체계가 마련될 때 비로소 미래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논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설계의 근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청소년과 청년을 잇는 '미래세대부'의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는 이들이 더 넓은 광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독립된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구축해 온 넓은 틀에 청소년과 청년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제 미래 세대의 문법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담긴 미래세대부가 그 혁신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사실

광주 1인가구 증가세, 촘촘한 복지망 중요

광주지역 나홀로 가구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가 최근 지역 1인 가구의 경제여건과 소비 현황, 생활패턴 등을 심층 분석한 '1인 가구 실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 내 1인 가구는 총 23만221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 62만8551가구의 36.9%나 됐다.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2.4%에서 2024년 36.9%로 4년 새 4.5%p 늘어났는데 반해 이 기간 광주 전체 인구는 2.9% 감소해 사뭇 대조적이다. 또 자치구별로 동구가 전체 가구의 44%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컸고, 서구 38.7%, 북구 38.2%, 광산구 33.7%, 남구 33.6%로 뒤를 이었고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38%, 청년층 36%, 노년층 25.8% 등으로 분포돼 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보통 수준을 밑돌고 있고 다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 안전·주거에 취약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경제여건을 보면 이들의 63.8%는 연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 머물러 있었고 월평균 신용카드 지출액은 95만원 안팎이었다.

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한 1인 가구는 이들보다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비율이 높았고 월평균 신용카드 소비액 105만원으로 20만원이나 많았다.

1인 가구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주변에 손을 내밀 곳이 부족했다. 돌발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청할 조력자가 곁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72.8%로 다인 가구(86.6%)에 못 미쳤다.

또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도와달라는 의견(36.1%)도 있었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원한다는 응답(53.3%)도 높았다.

이번 분석은 무엇보다 매년 증가추세인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패턴과 소비 행태를 도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함께 연령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혼자서도 가치 있는 광주생활-솔로 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등은 이들 가구가 외롭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촘촘한 복지망 구성에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사라지는 순수전세·주거사다리 지원 절실

광주에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면 되는 이른바 '순수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역 주택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1분기 광주 전·월세 계약 6153건중 월세는 49.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880건)의 월세 비중 46.1%보다 3%p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같은 상승세는 최근 몇 년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37.6%였던 월세는 2023년 1분기 41.8%, 2024년 1분기 42.2%로 꾸준히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0%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과 무관치 않다.

즉, 임대차 수요층은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에 대한 불안이 커져 전세를 꺼리고 있고 집주인도 금리 부담과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전세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의 아파트 매매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3일 기준 매매 매물은 2만6977세대에 달한다. 2023년 1만4521세대에서 2024년 2만578세대, 2025년 2만3560세대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면 월세 매물은 1613세대로 2024년 말(2037세대)보다 26% 넘게 줄고 2023년 말(2346세대)보다는 45%가량 감소했고 전세 매물 역시 2472세대로 2년 전(3813세대)과 3년 전(3841세대)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또 집값 하락 우려로 관망세가 짙어진 매매시장의 매수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목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묶어두기보다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초기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순수 전세가 사라질 경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길어지고, 주거 비용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이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40	는 성 실 370-7200	경 채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팩스 (062) 385-5400	문 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인 사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인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